

2007년 03월 05일 031면

漂流하는 ‘大慶경제통합’ 다시 박차를

대구·경북 경제통합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도모된 경제통합 추진은 LG 필립스LCD의 파주 이전에 따른 위기 의식과 더불어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라는 인식까지 보태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추진 주체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법적 뒷받침마저 없어 漂流(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 우여곡절은 늘 뒤따른다. 하지만 이처럼 龍頭蛇尾(용두사미)로 끝날 일이었다면 시도조차 하지 말았어야 했다. 본란은 경제통합만 되면 대구·경북이 앓고 있는 병이 모두 치료될 것이라 장밋빛 전망을 경계했었다. 경제통합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란 얘기였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경제통합을 전파하고 다닐 때 이를 예견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주문한 바 있다.

행정통합이 전제되지 않은 선언 차원의 경제통합 추진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이미 예견됐었다. 경제통합추진위를 발족하고 사무국까지 신설했지만 관련 조례와 입법안 제정이 지체되면서 경제통합 추진 주체까지 모호해졌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게다가 경북 북부지역 도의원들이 대구권의 확장만 초래한다며 경제통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그래도 이 정도 장애는 뛰어넘어야 한다.

새삼 강조하자면 대구와 경북은 이와 입술의 관계다. 두 지역이 목을 매는 대기업 유치만 놓고 보자. 대구는 산업용지 부족으로 유치가 어렵고, 경북은 定住(정주)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쉽지 않다. 구미시가 하이닉스 유치를 선언했을 때 본란이 대구시가 지원에 나서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LG필립스LCD가 파주로 떠날 때의 다급함을 벌써 잊었는가.